

기고

김 병 록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국민의 존엄을 실현할 정책가를 선출하자

현대사회는 정보과학과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재제를 융합하고 연결함으로써 새로운 가치와 혁신의 창출이 가능한 사회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이 등장하면서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복잡하고 다양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과학·기술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인구·사회·자연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여 기능이 확대되고 있으며 종합적이고도 전문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된다.

지난해 12월 중국 후베이성(湖北) 우한(武漢)시에서 시작한 것

으로 추정되는 코로나19 감염병이 중국 전역으로 퍼지고 이란, 이탈리아를 비롯한 유럽, 미국, 그리고 일본 등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3월 11일에 세계보건기구(WHO)는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유행되는 팬데믹(pandemic) 상태에 이르렀다고 선언했다. 이는 WHO가 선포하는 감염병 최고 경고 등급으로 1968년의 홍콩독감, 2009년의 신종플루에 이어 세 번째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세계 각국이 한편으로는 대통령 선거와 같은 정치적 이유나, 올림픽 개최 실패에 따른 경제적 이유로, 또는 문화적 이유 등으로 조기에 올바른 정책적 대응을 하

지 못한 것에 연유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 이번 재난은 단순히 감염병 확산이라는 보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세계 경제 대공황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가의 정책적 능력이 더욱 요구된다.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면 국민의 생명에 희생당하거나 생활이 불편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가 지난 1997년 경제 위기를 통해 경험했듯이, 미래 세대에게도 지속적으로 희생과 불편을 강요하게 될 것이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코로나19 팬데믹과 경제 대공황 상황을 앞두고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정책결정자를 선출하는 중대한 선거이다. 우리의 미래를 누구에

게 맡길 것인가?

현대 정책 연구의 효시를 제공한 것으로 인정되는 미국의 라스웰(H. Lasswell) 교수가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냉전 대립, 이념과 인종 문제로 촉발된 사회적 갈등 등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면서 주장한 인간 존엄의 정책 연구에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즉, 소수 정책결정자의 이념 및 기호에 기인한 추상적인 가치관 단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지 않고, 사회의 복잡한 이슈를 체계화되고 객관화된 인식의 틀을 통해 신중하게 통찰해 봄으로써, 모두에게 이로운 인간 존엄의 정책 결과를 이끌 수 있는 정책결정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후보자들의 정책공약과 경력을 꼼꼼히 살펴서 특정 정치관계자들의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 가치를 우선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의 존엄을 실현할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회의원을 선출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 지금 세대의 문제를 극복하고 다음 세대에게는 밝고 운택한 미래를 맞게 할 수 있다.

社 說

재난지원금 집행 빠를수록 좋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선정할 때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3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건강보험료는 긴급지원금을 한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알이 검증할 수 없는 현실에서 모든 국민을 가입자로 둔 건강보험료보다 보편적 자료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상 초유의 재난지원금은 소득 수준이나 지자체의 자체 지원금 등과 맞물려 처음부터 형평성 시비가 있었고 앞으로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듯하다. 실제로 건강보험료는 현재 소득 상황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못한다. 지역가입자는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토지·자동차 등의 재산까지 고려해 부과하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만 갖고 계산한다. 게다가 100명 이하 사업

장 가입자의 경우 최신 소득자료가 아니라 작년 자료를 토대로 산정하기에 코로나19 여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럼에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한 이유는 시급성 때문이다. 형평성을 높이려면 전 가구의 부동자산과 금융자산 등 소득인정액을 조사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대상자 선정에만 수개월이 소요된다. 생산·소비 급감과 이에 따른 소득 감소가 큰 충격과로 이어진 절박한 상황에서 지원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때에 따라 한 모금의 물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인 생명을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원 기준을 정한 만큼 신속한 집행을 위해 후속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아무리 재난지원금이라 해도 돈이 결린 문제인 데다 전체 가구의 30%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지원 방식과 선정 기준을 둘러싼 불만과 비판이 있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총선이 코앞으로 닥친 시점여서 정치적 공방 또한 거세다. 하지만 70%에 달하는 국민 대다수가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속도로 터널 사고 피해 최소화 해야

상춘객 증가로 인한 고속도로 터널 교통사고 시 현장 초동 조치로 피해 최소화 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터널사고의 경우 다수의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터널내 사고시에는 긴급 상황에 대처 할수 있는(소화기, 옥내소화전, 긴급전화, 긴급벨, 비상방송 스피커) 소화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만큼 초기 적절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겠다.

또한 터널 내 위급 상황시 활용할 수 있는 피난 연결도로와 피난 갱문이 갖추어져 있지만 관심부족으로 사용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터널에 진입할 때에는 전조등

을 켜고 감속해야 한다. 또 터널 안에서 차선변경을 하게 되면 뒤차가 급제동하게 되므로, 차선 변경은 금물이다.

터널 내 사고 시 자동차는 피난 연결 도로가 있는 경우 피난 갱문을 열고 대피하고 피난 갱문은 손으로 개방한다.

그리고나서 1분후 자동 폐쇄되고, 피난갱문은 사용하고자 할 경우 양쪽으로 개방하여 도어 하부 잠금 장치 고정 사용하며, 활동 후 잠금장치 해제 해야 한다.

또한 관계기관의 정기적인 터널 안전 시설물 확인 점검으로 유지사 운전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당부 드리고 싶다.

황신욱 / 보성119안전센터 소방위

힘들지만 이것이 행복인 것을

주변을 둘러보아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는지 또한 사회 전체가 힘든데 일을 하지 못해 하소연 하는 마스크를 보고 있노라면 왠지 마음이 착잡하고 기운이 빠진다. 집 주변 인력시장을 자주 보면서 생활하지만 5시 40분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복직거리고 오늘 일할 수가 있을까 걱정하는 눈치들이다.

호명(呼名)을 받은 사람들은 작업 현장에서 온 사람을 따라 어디론가 떠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대로 의자에 앉아 있거나 커피를 마시며 사무실을 서성거린다.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은 일 나가 하루 일당을 벌어서 생활해야 하는데 오늘도 기다리면서 일할 수 있으면 하는 간절함이 마음속에 내포되어

있을 것이다.

7시가 넘도록 이곳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일을 잡지 못한 사람들 상당수가 집으로 돌아가고 오늘 모두 허탕을 친 셈이다. 요즘은 인력사무소 경기가 좋지 않아 허탕치고 들어가는 날이 많다고 말한다.

그들이 최근까지 어떤 신문을 누려왔으며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있는가를 헤아려 보는 것은 부질없는 짓이며 하루 품팔이 일거리나마 찾을 수 있었는지 못내 궁금할 따름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절박했던 어려운 시절을 능히 이겨낸 집념과 의지로 엮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모두가 행복하지 않을까.

국종균 / 광주북부소방서 지휘담당

생활정보전화

-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 응급질병상담 1399
- ▲ 미아·가출인신고 182
- ▲ 여성 긴급전화 1366
- ▲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 1388
- ▲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 ▲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 응급의료센터 1399

긴급전화

- ▲ 기상예보 131
- ▲ 법률구조상담 132
- ▲ 인광 알콜류 상담센터 222-5666
- ▲ 광주 남성의 전화 673-9001
- ▲ 광주 여성의 전화 363-7739
- ▲ 수도 고장신고 121
- ▲ 전기고장 신고 123
- ▲ 가스사고 신고 383-0019

등록번호 광주기 0021 (일간)

호남신문

대표전화 (062) 229-6000
광고국 (062) 224-5800
기사제보 (062) 971-7400
팩스 (062) 222-5547

회 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로62가길 16-1
Tel (02) 2238-0003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건설업(비계 구조물 해체공사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수집·운반)

석면해체·제거업

신원건설산업(주)
신원자원 (자회사)

전라남도 나주시 세지면 예향로 3230
TEL: 061)333-6832 FAX: 061)334-7701
광주사무실: 광주광역시 광산구 원도산길 62-4

